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같길 간다

### 홍준표 “부끄러움 알면 기웃거리지 마라”...조정태·김태흠도 ‘반대’

### 초·재선 당선인과 일부 중진 金비대위 지지...쇄신 구상과 여론 맞닿아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위기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됐지만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드러난 ‘반발’ 보다 수면 아래의 ‘지지’ 목소리가 더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김종인 호’가 출범해 순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통합당 안팎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종인 비대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사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 무소속 당선인)와 조정태 최고위

만 큼 반대 목소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당 최고위원 중 유일한 총선 생환자인 조정태 의원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권한과 기한을 보장하라는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당에 가입한 후 전당 대회에 출마해 당원의 심판을 받게 더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김태흠 의원도 오는 28일 열린 전국위원회의 보류 여론이 당내에 상당하며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여기에 유승민계 대표적인 조해진 당선인 역시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인물도 만만치 않은데, 찬성 입장에 불구하고 적극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40명(당선인 총 84명)의 초선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기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종인 비대위’가 충분히

동력을 얻을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재선에 성공한 통합당 의원 모임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산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전 위원장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김종인 비대위’를 돕는 게 우선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당선인 대회를 연다고 해도 초선과 재선을 합한 약 71%의 당선인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어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쇄신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5선에 성공한 정진석 의원과 3선에 성공한 하태경 의원, 원외 인사지만 이준석 최고위원과 낙선한 4선의 신상진 의원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의 쇄신 구상과 통합당에 바라는 여론이 맞닿아 있는 점도 순항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법적 처벌을 받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 유감 표명 또는 공개 사과하겠다”면서 “비대위를 원의 3040세대 2~3명과 초재선 현역 의원으로 꾸리겠다”고 740(70년대생 40대)~830세대(80년대생 30대)를 당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알렸다.

김윤호 기자



## 총선 못끝낸 당선인 100여명 ‘배지 반납’ 수사·재판 속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잠시 미뤄졌던 주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재개됐다. 당선인 다수가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된 상태로 ‘금배지 반납’ 영향권에 들면서 총선은 1라운드를 지났을 뿐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으로 중단했던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개입 등 관련 중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총선 전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구·전북 익산을 당선인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수사를 대략 2개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 신분인 황 전 청장과의 한 전 수석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려있는 등 정치적 파급효과가 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부담도 큰 상황이다. 21대 국회 개원(5월30일)까지 약 한달 여가 남은 가운데 당선인 신분인 이들을 개원 시점부터 불체포특권을 갖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여부도 2개월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전 두 사람을 각각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검찰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동 사건 재판도 재개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

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 모두 12명이다.

민주당 박병계·김병욱·박주민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이철규·박성중·곽상도·윤한홍·송언석·이만희·김정재·김태흠·장제원 의원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또한 법원 판단에 따라 당선인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는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혐의인 국회법 위반의 경우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밖에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으로 지난 21일 첫 공판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강원 강릉에서 당선된 권성동 당선인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장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윤호 기자

## “전남, 혁신기술창업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삼아야”

도의회 김기태 의원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됐다.

김기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 성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고려해 전남도는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3,600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4차산업 분야 벤처기업이 비(非)4차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나 고용증가율 등이 더 높아 경영성과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권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63.3%

로 가장 많고 전남에는 2.9%가 분포돼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창업기업의 창업율도 16.80%로 17개 시·도 중 전북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자료: NICE평가정보)

조례 주요 내용은 전남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전남형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창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청년창업자 우대사항 규정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혁신창업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지원과 출연금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안철수, 이번주 다시 ‘의사’로 돌아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주 초 다시 ‘의사 안철수’로 돌아간다. 2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의 오는 27~28일 대구를 찾는다. 4·15 총선 이후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달 15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의료 봉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4·15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와서 중대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지난달 1~15일 대구로 내려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